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위한 금융개혁의 모색

2015. 6. 5

최 흥 식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한국 금융의 현실 인식

3

금융자산국가로의 비전 설정

4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5

맺음말



1. 논의의 배경

-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금융의 위기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
 - 외환보유고의 확충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리스크 및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
 - 가계부채의 규모와 구성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
 - 유사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거시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간의 상충이나 금융감독의 이원적 구조 등 비효율적 시스템도 여전



논의의 배경(계속)

- 금융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로 기존 소득기반 복지정책의 한계가 노출
 - 금융이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경제 주체의 인식은 여전하며, 최근에는 금융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빈발
 -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는 정부 재정으로 사회보장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 한국형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 일부 계층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
- 금융부문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미래, 나아가 한국 경제는 암울
 -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노조 등은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금융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목 차

1 > 논의의 배경

2 > 한국 금융의 현실 인식

3 > 금융자산국가로의 비전 설정

4 >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5 > 맺음말



쌍둥이 격차와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

- 한국 금융산업의 쌍둥이 격차(twin gap)와 금융에 대한 피터팬 증후군적 인식은 한국 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미래 한국 금융의 역할을 왜곡 축소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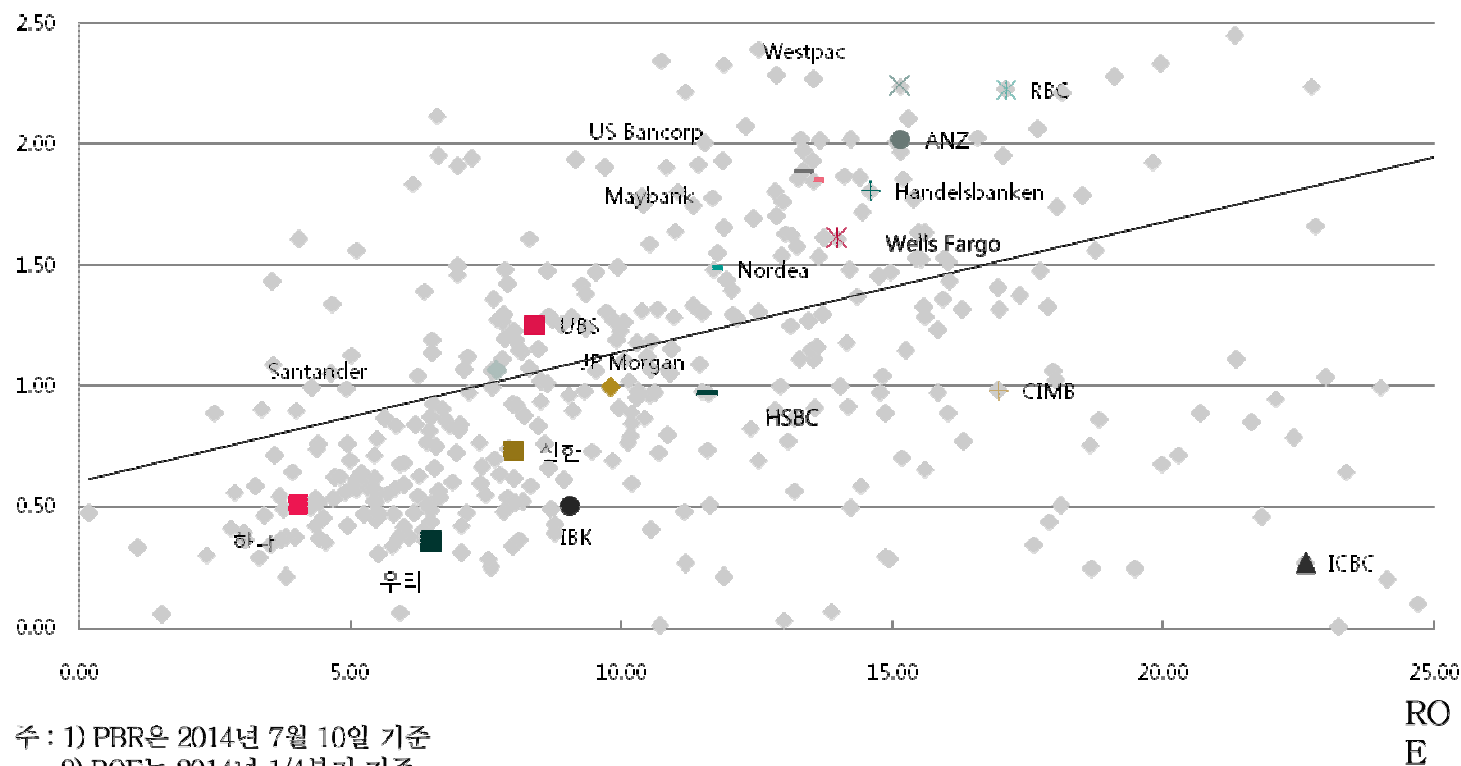
➡ **한국금융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축소시키는 걸림돌로 작용**



쌍둥이 격차: ① 국내은행의 낮은 가치 평가

- 국내은행의 가치평가는 시장평균을 크게 하회,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를 밑도는 수준($PBR < 1.0$)

글로벌 1000대 은행의 ROE와 PBR





쌍둥이 격차: ② 취약한 국제경쟁력

-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각종 조사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미흡
-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나, 내세울만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없다는 한계가 자주 지적
 - 뱅커(The Banker)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0대 은행에 속하는 국내은행들은 9개에 불과

우리나라 금융부문 국가 경쟁력

기관	지표	순위	대상 국가	기준 년도
World Economic Forum	The Financial Development Index	12	62개국	2013
World Economic Forum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80	144개국	2014
IMD	Business Efficiency 중 Finance	28	60개국	2013
The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9	79개국	2013
Heritage Foundation	Financial Freedom	31	178개국	2013

자료: WEF, Z/YEN, The Heritage Foundation, WSJ, IMD

World Retail Banking 순위

순위	은행명	국가	총자산 (백만 달러)	ROA	C/I Ratio	NPL
1	ICBC	China	3,100,254.34	1.79%	32.31%	0.94%
2	China Construction Bank	China	2,517,733.53	1.82%	33.80%	0.99%
3	JP Morgan Chase & Co	US	2,415,689.00	1.07%	72.39%	3.15%
4	Bank of America	US	2,104,995.00	0.77%	76.65%	4.66%
5	HSBC Holdings	UK	2,671,318.00	0.84%	54.15%	3.22%
6	Citigroup	US	1,880,617.00	1.05%	63.80%	2.39%
7	Bank of China	China	2,273,729.76	1.53%	38.84%	0.96%
8	Wells Fargo & Co	US	1,527,015.00	2.11%	56.76%	5.19%
9	중국농업은행	China	2,386,447.39	1.47%	38.89%	1.22%
10	MUFG	Japan	2,451,395.50	0.60%	-	-
...
68	KB 금융그룹	한국	276,519.00	0.62%	53.44%	1.67%
69	신한금융그룹	한국	294,956.00	0.86%	48.39%	1.16%
75	우리금융그룹	한국	322,807.00	0.22%	53.92%	2.81%
78	KDB 금융그룹	한국	187,982.00	-1.13%	67.61%	4.40%
84	하나금융그룹	한국	279,694.00	0.43%	49.7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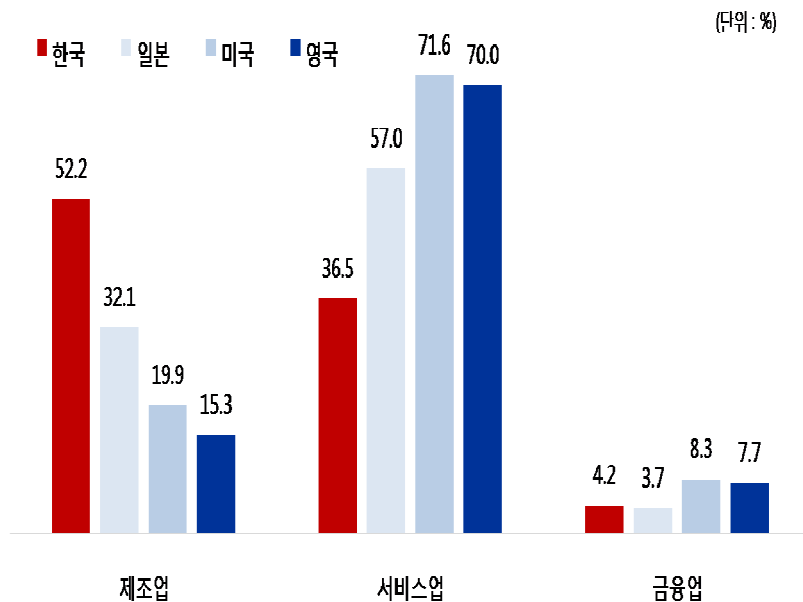
- 자료: The Banker, 2014년판



쌍둥이 격차: ③ 실물부문과의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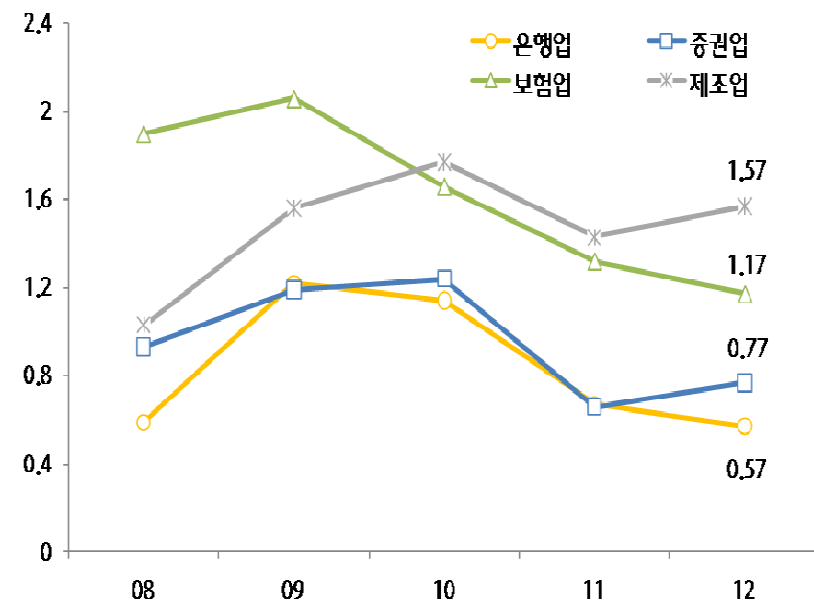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중은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금융선진국의 절반에 불과
-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도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총산출액 대비 비중



주: 산업별 산출액을 전체 산업의 총산출액으로 나눔
자료: 금융투자협회

업종별 PBR 추이



주: PBR = 주가 / 주당순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

① 정치적 목적의 금융정책

- 금융정책의 정치화
 - 정치적 금융정책 책정
 - 예: 녹색금융, 기술금융 등
 - 정책적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강제되는 경향
 - 예: 동북아 금융허브
 - 집행된 금융정책의 상당수는 재정정책을 대신하는 것
 - 예: 서민금융정책
- 금융감독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종종 이용
 - 금융수요자보다는 금융공급자 위주의 금융감독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

②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국내에서도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역사가 있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
- 이러한 사회분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업성을 띠며 사적 이익을 강조하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

한국 경제발전사의 특징

- 수출 제조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인해 “금융은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성장 견인차인 제조기업을 힘들게 한다”라는 인식이 팽배
- 기업을 만들어온 히스토리가 부재하고, 운 좋은 사람들이 경영진이 되어 돈을 번다는 인식
- 공적자금 지원에 의한 회생의 역사

금융회사의 특징

- 금융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하므로 남의 돈으로 이익을 낸다는 거부감
- 금융위기 발생으로 일반 개인들의 삶은 어려워졌으나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호위호식하는 모습에 반감

금융회사가 야기한 측면

- 민간 금융회사가 상업성만을 지나치게 강조, 공공성은 주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
- 불투명한 금융상품 가격 결정체제로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 (예: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 낮음)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

- 무형의(intangible) 서비스인 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가격 지불에 대한 인식 부족
- 흔히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인식
 - > 금융상품 개발노력이나 신용심사, 리스크 관리 등 고도의 업무 수행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

③ 지나친 금융규제와 타율 경영에 젖은 금융회사

- 금융산업은 지나치게 많은 규제의 울타리에 있다는 평가이고, **법령에 의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함은 물론 **법령에 의하지 않는 숨은 규제**를 혁파하여야 함.
 - 숨은 금융규제에 의한 관치금융은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빼앗고 금융회사에 타율적 경영태도가 젖어 들게 함.
- 숨은 규제 중 행정지도, 인사 개입, 과도한 보고 받기 등은 시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항상 있어 왔고, 모범규준은 1999년 처음 나타나 현재 50여 개에 이르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림자 금융규제**
 - 모범규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닌 그림자 규제
 - 모범규준이 양산된 이유는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나 입법화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 규제 신설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 규제의 양산은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을 가로 막아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규제 양산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다. 피터팬 증후군적 금융인식: (계속)

③ 지나친 금융규제와 타율 경영에 젖은 금융회사

- 금융정책의 정치화와 그림자 금융규제의 양산의 이면에는 금융회사의 현실 안주적이고 외부 정치권이나 규제당국에 기대는 타율 경영방식에도 문제점이 내포
 - 법령에 의거 규제하는 것도 관치금융이지만 이것은 합법적이고 금융감독당국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역할임
 - 물론 금융관련 법령이 적절한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함.
- 노조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함몰되어 있는 금융노조도 장기적이고 자기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목 차

1 > 논의의 배경

2 > 한국 금융의 현실 인식

3 > 금융자산국가로의 비전 설정

4 >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5 > 맺음말



발전방향 설정시 고려 사항:

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개방경제국가

-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규모 개방경제 국가임을 인식해야
 - 금융산업의 발전은 자국 통화의 위상에 따라 결정
 - 한국은 상시적으로 금융부문이 해외 충격에 직면
- 비기축통화국은 대외부문 또는 외환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물경제 경쟁력과 대외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
- 비기축통화국으로서의 전략 수입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발전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합리적
 - 비기축통화국의 글로벌화는 국가적 경쟁력을 **금융자산 축적**과 적절히 연계할 수 있을 때 실물과 금융의 병행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 가능
 - 호주의 자본시장 개혁 및 연금체계 개편, 싱가포르의 대내 및 역외금융의 분리를 통한 강소국 금융전략 등



발전방향 설정시 고려 사항: ②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 대비

- 자본주의 경제하의 금융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여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은 불가피**하며, 이 때 충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함.
 - 경제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산업에 강력한 미시건전성 규제 필요
 - 감독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동격발(automatic triggering)이 가능한 단순명료한 규제 감독 장치 마련
 - 금융시장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제도 마련
 - 금융회사는 인허가에서 얻는 렌트를 기본 수익으로 하므로, 과도하게 호혜적인 유인체계는 대폭 개선
 - 금융정책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에 다수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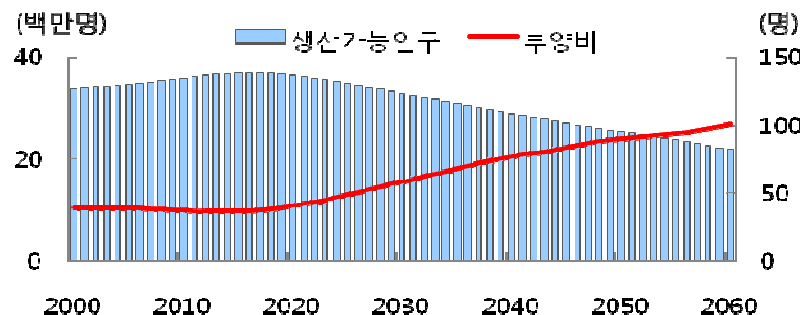


발전방향 설정시 고려 사항:

③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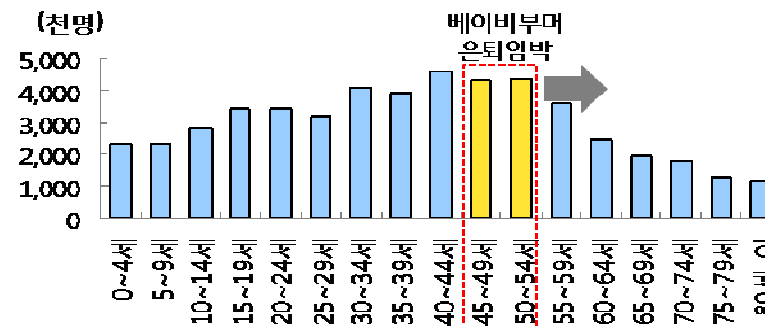
- 고령화, 소득 양극화, 2인 이하 소형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인구구조 및 생활 양식이 급변
- 금융니즈 역시 연령별, 계층별, 성별, 가족형태별로 다양화되는 추세 강화

저출산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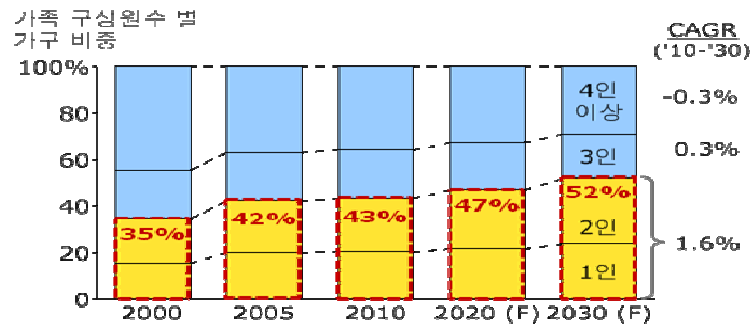
주: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를 의미

고령화에 따른 Silver 세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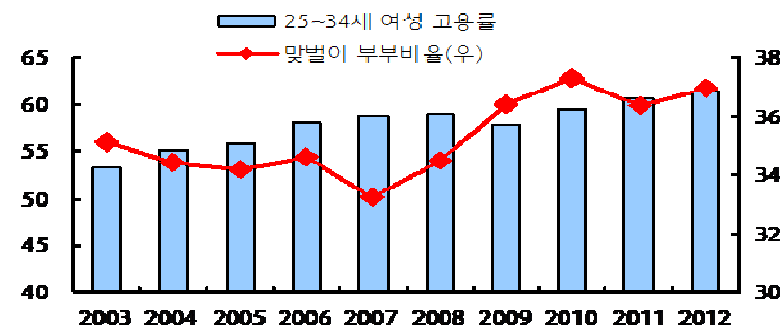
주: 2013년 기준

소형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



자료: 통계청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산기반 복지로의 전환

- 인구 감소 경제시대'와 '소득/자산 양극화 시대'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기반 복지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음
- 개인의 장기간 생애에 걸친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정부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자산기반 복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제가 **과감한 세제혜택**임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추이

유럽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재정난으로 소득기반 사회복지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짐

-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에는 한계
-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개개인의 투자자화와 장기투자 강조

소득기반 사회복지 → 자산기반 사회복지로 이행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장기투자로 자산기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추세로 여러 제도적 지원과 함께 투자상품도 다양화

자산기반 복지정책의 효과

-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기회를 재분배
- 사후적 보호가 아닌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 어린이펀드와 개인저축·투자계좌 등 생애 전반에 이어지는 장기투자로 노후보장의 안정화 달성



금융비전의 설정

- 건실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내외 금융자산을 통한 **금융자산국가**로 발전

기 본 방 향

①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 **대내안정화**: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 형성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통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화
- **대외안정화**: 해외자산 확보와 외화(특히 달러화) 자산의 축적을 통한 외환시장 취약요인 해소
- 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 감독 강화는 불가피

② 금융부가가치 창출

-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실물경제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경로와 역량 확보를 통해 금융부가가치 창출

③ 자산기반 복지 추진

- 금융자산에 대한 개인의 생애에 걸친 장기투자자로서 **자산기반 사회복지** 추구
-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노력 요구
- 금융소외자를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활성화



목 차

1 > 논의의 배경

2 > 한국 금융의 현실 인식

3 > 금융자산국가로의 비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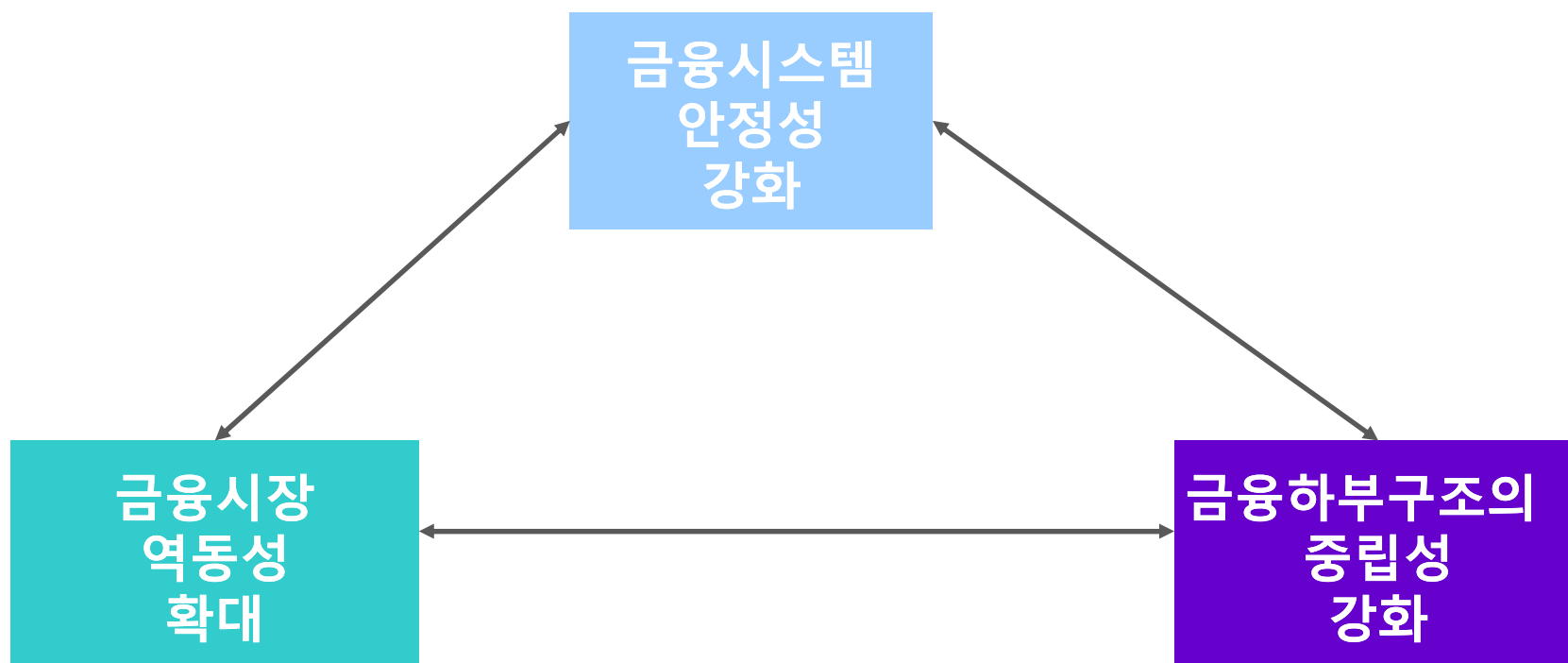
4 >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5 > 맺음말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 금융자산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1)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2) 금융시장의 역동성 확대, (3) 금융하부구조의 중립성 강화임.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 대외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부문의 해외자산 축적이 지속될 필요
- 금융과 산업분리는 계속 유지될 필요.
- 가계부채구조를 변동금리부에서 고정금리부로 변경함으로써 거시적 위험 축소
-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해외자산의 축적

- 외환보유고는 외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 민간부문에 의한 해외자산 축적은 완충기반을 제공
-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 신축적인 자본통제

가계부채 위험관리

- 가계 부채 위험 축소를 위해 커버드 본드를 통한 고정금리부 분할 상환 대출 활성화
- 커버드 본드에 신용보강
- 균형원칙(principle of balance)으로 고정금리 대출에 상응하는 커버드 본드 발행

은산분리의 유지

- 금융과 실물부문의 상호건제는 필수적인 요건
- 금산분리 경향은 글로벌 추세
- 국내 금융자본 육성에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 레버리지 비율을 상향조정(예: 8%)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



금융시장의 역동성 강화

- 외국자본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적극적으로 활용
- 대내외 공공자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의 경우 자산운용체계 개편을 고려
- 경영권시장은 자본시장의 성장 촉매제에 해당
- 거래소 시장은 국제화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장단기 금융시장 연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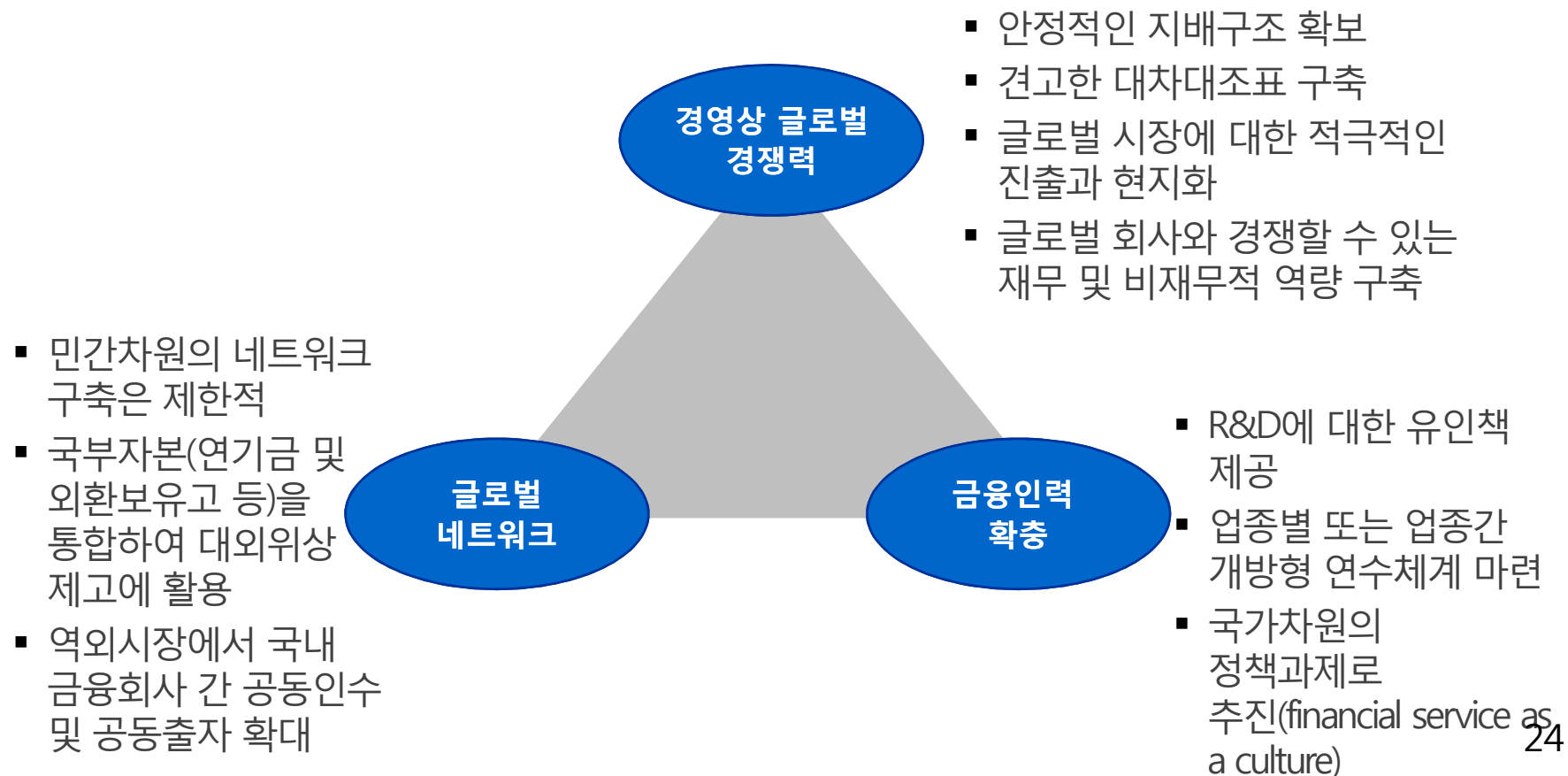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자본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 활용• 국내자본도 자본수출국 전환에 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본 형성 및 자본시장 심화에 적극적으로 활용• 운용조직을 분리하여 중립성 확보• 단일기구 운용방식에서 분산운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권 시장은 자본시장 발달에 필요• 보호주의 정책은 가능한 최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관련 국가와의 협력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을 지닌 장기금융시장의 존재는 금융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국채시장 확대와 맞물려 RP시장의 활성화 필요• 장기채권시장의 육성 |
|---|---|--|--|---|



금융시장의 역동성 강화 (계속):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여건 마련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지원: 세제지원 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국내 공공자금을 활용
- 금융인력 확충을 국가차원의 정책과제로 추진





금융하부구조의 중립성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정책은 거시경제정책조직,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전담조직이 각각 담당
-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금융감독기능을 법적 계약을 통해 금융감독 전담조직에 위임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부과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통할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배구조를 보다 개방적인 외부 의견이나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내 증권선물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 금융감독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여 금융감독집행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을 설치
 - 금융감독원내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감독, 소비자보호 감독 전담 조직을 설치
 - 금융감독조직을 목적지향적이고 기능별(감독정책, 검사, 제재 등)로 구축
- 거시경제정책부서,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 금융감독기구를 감시하고 방향성을 정립해주는 특별 위원회(속칭 the Sentinel)을 설치



금융하부구조의 중립성 강화(계속): 금융법률 개편

-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금융법의 통합을 재추진
 - 개별 금융법이 산재하여 규제차익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통합법 추진 필요
 - 포괄주의(negative system)에 입각한 기능별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 법률개편을 금융개혁과 금융발전 수단으로 활용
 - 예: UK와 호주
 - 역외시장과 국제경쟁력, 글로벌화에 초점을 둔 법률개편이 필요
 - 통합법 마련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 상위법과의 상충문제 해소, 대륙법의 한계 등을 고려



금융하부구조의 중립성 강화(계속): 그림자 규제 철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규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한시적 설치 운영함(성대규(2015)).
 - 행정지도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행정지도를 하게 된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금융규제혁신법을 제정
 - 이자율, 수수료율, 보험료율 등과 같은 가격과 관련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
 - 인적 제재를 감축시키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를 확대하며, 기관제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상당한 과징금 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모범규준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고 자율적인 권고에 불과함을 선언
 - 감독당국의 주도하여 작성한 기존의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령에 포함시키되 나머지는 폐지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한국 금융의 현실 인식

3

금융자산국가로의 비전 설정

4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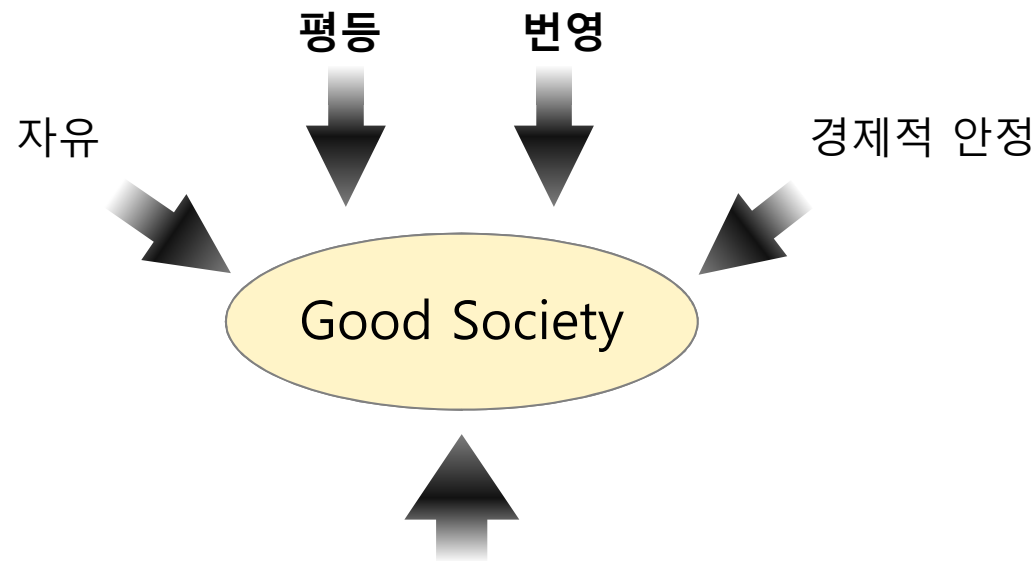
포용적 정치·경제체제의 구축

-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
 - 지배기득계층만을 위한 제도는 정체와 퇴보를 낳음.
 - 시장경제체제 자체가 반드시 포용적 제도를 보장하지는 않음
 -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기업이 혁신적인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음
 -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핵심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치가 긴요



금융을 통한 '좋은 사회'의 구현

-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좋은 사회(Good Society) 확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자유, 번영, 평등, 경제적 안정과 같은 '좋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금융의 기여 방법은?
- 금융 발전의 사회적 편익이나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며, 이것이 소위 '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의 요체 (Shiller(2012))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규제 혁파와 금융자산국가로의 발전

- 금융부문 관련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존 금융시스템을 과감히 혁파한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금융자산국가**로 나아가고자 경주할 필요
 - **국회**는 현존 금융법을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법으로 개정
 - **금융정책당국**은 금융감독권한을 계약으로 민간에게 위임하고 책임성 부여
 - 금융규제 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법령에 의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
 - **금융회사**의 보수 및 유인체계의 개편하고 자본금과 유동성 규제 강화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금융자산의 보유를 확대
 - **금융노조**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금융발전에 일익을 담당
 -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는 금융 각 부문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
 -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기회의 창**(political windows of opportunities)이 왔을 때 또는 올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



EOD